2017년 교육행정직 9급 행정학(17. 6. 17) - 책형

출제유형분석

총론	3	재무행정론	3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4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행정론	3

0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해설 ③ [×] 규제개혁은 각 부처와 이익집단 등에 의한 이기주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규제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엄격한 사후관리(사전적 규제 ×)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4

▶ ③

0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해설 ① [×] 보수주의는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가지며, 정부를 불신한다.
③ [×]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진보주의 VS 보수주의〉

구 분	진보주의	보수주의
시장과 정부관점	•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 시장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수정	•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 정부불신
선호정책	•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 공익목적의 정부규제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 소외집단 지원정책 비선호 • 경제적 규제 완화, 시장지향 정책 • 조세 감면과 완화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0

▶ ②

0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가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높다.
③ [×]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다.
④ [×]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53

▶ ②

0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ㄴ, ㄷ, ㄹ [○]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보의 충분한 획득, 정책델파이, 집단토의 등은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해소방안)에 해당한다.
ㄱ [×] 민감도 분석은 소극적 해소방안이다. 소극적 해소방안에는 이 외에도 보수적 접근법, 중복성(redundancy) 등의 방법이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45

▶ ③

0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① 강의 (lecture)
② 액션러닝 (action learning)
③ 감수성훈련 (sensitivity training)
④ 현장훈련 (on-the-job-training)

해설 ③ [○]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감수성 훈련은 외부환경과 격리된 계획된 장소에서, 훈련집단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하는 훈련이다.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96, 497

▶ ③

0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해설 ① [×]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참여자 간 관계가 유동적이며, 안정성이 낮다.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로 가정하는 것은 하위정부 모형이다.
② [○] 하위정부모형은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 등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그들의 지속적인 교호작용과 협력, 합의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③ [○]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둔다.
④ [○] 정책공동체모형에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정책공동체는 구성원 간 관계가 의존적이고 협력적이며, 문제와 해결대안에 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협력한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비교〉

하위정부 모형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관료 + 의회 상임위 + 이익집단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
안정적·폐쇄적	불안정(유동적, 일시적)	안정적(지속적, 장기적)
이해관계 일치 (동맹적)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의존적, 협력적, 신뢰 (Positive-sum game)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의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분배정책분야에서 주로 형성	권력의 다원론과 상관성 큼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 정책내용 합리성 제고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04~207, 277

▶ ①

0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해설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낮아지는 원인을 크게 '업무 환경요인'과 '직무자체와 관련되어 있고 성장감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누고, 근무 의욕이 낮은 것은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④ [○] 위 지문은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의 이론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허즈버그의 욕구총족요인이원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동기요인)이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보고, 만족요인(동기요인)의 증대가 인간의 자기실현 욕구에 자극을 주고 직무수행의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구 분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 격	직무외적 또는 근무환경 요인	직무자체 요인(직무내용)
예 시	조직의 정책(행정)과 관리,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직무, 인정감, 보람, 책임감, 성취감, 성장감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94

▶ ④

0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해설 ① [×]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다.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97, 863

▶ ①

0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해설 ① [×] 점증주의 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합리주의 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이다.
② [×] 단절균형모형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이론이다. 하지만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③ [×] 예산극대화모형(니스카넨)에서 사회 후생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가이다. 관료는 공공재의 비용보다는 편익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실제 비용이 예산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37, 628, 629

▶ ④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 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③ 진실험 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한다.

해설 ① [×]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아도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 즉, 신뢰도는 타당성의 필요조건이다. 어떤 측정에서 타당성이 높다면, 그 측정의 신뢰성은 높지만, 신뢰성이 높더라도 그 측정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 맥락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로 이루어진 CIPP 모형은 (Stufflebeam)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③ [○] 진실험 설계에 있어 무작위(random) 배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④ [×]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정책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를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94~300

▶ ③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① [×] 분권교부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X)로 통합되었다.

②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액의 일정비율(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 20%를 재원으로 한다.

③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④ [○] 특별교부세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가 가능하다.

> **동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55, 856

▶ ④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은 경력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ㄴ [×] 감사원 사무총장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정무직(별정직 X) 공무원에 해당한다.
ㄷ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여부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ㄹ [×]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 기술,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공무원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68

▶ ②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 장점인 유연성·자율성·전문성·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배분·이용한다.

해설 문제의 지문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구조인 매트릭스 구조에 관한 것이다.
① [×], ② [○]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에 대한 동시적 필요가 요청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로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낮아진다.
③ [○] 매트릭스 구조는 불안정하고 변화가 빈번한 환경에서 적절한 대응과 복잡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 할 수 있다.
④ [○]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구조로 인적 · 물적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어 유기적으로 확보 · 배분 · 이용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26

▶ ①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해설 ① [○]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다.
② [○]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임명동의와는 달리 결과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④ [○] 국회법 제46조의 3

>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83

▶ ③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 정치 · 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의 정책형성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 행태주의 행정학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연과학에서의 연구방법인 논리실증주의를 사회과학의 연구에 도입하여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연구대상을 사실에 국한시켰다.
ㄷ [○] 신행정학은 기존의 전문직업주의나 가치중립적 관리론에 대해 비판하고 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교범적 이론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ㄹ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화 · 시장화를 중시한 것으로 민간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9, 10, 11, 127

▶ ④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형은 조직 내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상황판단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중심적 위치(구심성 : centrality)를 차지하는 단일의 리더는 없다.

① 원(circle)형
② 연쇄(chain)형
③ 바퀴(wheel)형
④ 개방(all channel)형

해설 ④ [○] 지문은 개방(all channel)형에 관한 설명이다. 개방형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의사전달망으로 개방형망 내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누구나 하고 서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며 왜곡수준이 낮아 의사결정의 질이 가장 높은 의사전달망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21

▶ ④

1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설 ①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X)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 예산의 전용은 세항 - 목(장-관-항 X) 간의 상호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④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608, 651, 653, 654

▶ ④

18 우리나라의 관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ㄷ.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ㄹ.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ㄱ [○] 권위주의는 위계질서와 지배복종을 중시하는 문화로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 · 밀실화한다.

ㄴ [×] 집단주의(연고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일차집단적 유대를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시하는 문화로 파벌적 · 할거주의적 행태를 조장한다.

ㄷ [×] 온정주의는 인정, 우정, 의리 등 감성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로 공평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조장한다.

ㄹ [○] 형식주의는 외형(공식적인 것)과 내실(비공식적인 것)이 괴리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목표대치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24

▶ ②

19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 국가재정법 제29조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 동법 제31조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 동법 제30조

>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동법 제31조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96

▶ ③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① [×]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 의장 X)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② [○] 동법 제10조

> **동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시·군 및 자치구
>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동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 동법 제88조

> **동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4. 제명
>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22

▶ ①